

새로운 환경 과제 : 지속 가능 소비패턴



정 내 권

외교통상부 · 환경과학 심의관

1. 지속 가능 소비 패턴이란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스웨덴, 놀웨이 정부와 공동으로 제주도 제주시에서 “지속 가능 소비패턴: 東아시아의 추세와 전통”에 관한 유엔 지속개발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의 전문가 회의를 주최하였다.

금번 제주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소득 수준 상승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 추세, 세계화 (globalization)를 통한 선진국 소비패턴의 개도국에의 확산,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적 가치의 회복을 통한 소비패턴의 환경 건전성 향상 및 아시아 금융 위기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루어졌다.

소비 패턴과 환경간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프랑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이미 60년대 말에 현대 산업 사회를 소비사회라고 정의한 바 있듯이 대량 소비활동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며 생산부문 못지 않게 직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하바드 대학의 “줄리엣 쇼어” 교수는 “Overspent American”이란 최근 저서에서 현대 미국인들이 자신과 같은 사회 계층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압력과 광고 등의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경쟁적 소비라는 과소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제는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경쟁적 과소비의 굴레를 벗어나 각 개인의 실제 기본적인 필요에 의해 소비하는 새로운 소비 행태를 가진 소비자(New Consumer)의 출현

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도 최근의 금융 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 경쟁 심리와 신분 과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과소비가 팽배하였던 만큼 이러한 소비 행태의 문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다.

국제 사회에서는 세계화 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 대량 소비 체제의 환경적인 건전성을 항상시키지 않고는 환경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소비 행태의 환경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的 문제가 새로운 주요 환경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이라고 하면 국내에는 아직 생소하며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유엔과 OECD에서는 생산부문에 치중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 정책(폐수, 오염물질 방출규제 등)만으로는 환경 문제의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비 부문에 대해서도 환경 정책이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새로운 주요 환경 과제로 다루어 오고 있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논의는 소비행위로부터 초래되는 환경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한 채 무절제한 인간의 욕구를 무한정 확대 재생산하면서 끝없이 욕구의 충족만을 추구하는 현대의 소비문화와 이러한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시장 소비경제 체제 자체가 환경에 미치게 되는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대의 물질적인 소비문화에 대응하는 정신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소비문화의 창출과 시장 소비경제의

문제점(과도한 광고, 상대적 빈곤감, 경쟁적이며 과시적인 과소비 조장 등)도 논의 대상중의 하나이다.

놀웨이, 스웨덴, 화란 등 환경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증가를 곧 경제 성장으로 생각하는 현재의 경제 성장을 라는 지표만으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측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일한 생산량으로 어떻게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높은 만족과 복지(welfare)를 달성할 수 있는 가를 다루는 질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的 문제를 주요 환경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수입 외제 상품 보다 운송(transportation)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국산품이 운송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이 수입품 보다 적은 만큼 환경적으로 우수하다는 논리하에 자신들의 국산품 사용을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으로 정의하여 국산품 사용을 지속 가능 소비 패턴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소비 패턴의 문제 뿐 아니라 최근 산업화 과정에 들어서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개도국들이 선진국들과 같은 가구 당 자동차를 1 대씩 보유하는 등 선진국의 소비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 지구의 환경 용량이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개도국들에게 확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선진국들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일본 및 구라파 선진국들 보다도 소형 자동차의 사용 비율이 적고 대형 자동차, 대형 냉장고, 세탁기 등의 에너지 다량 소비형 가전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1인당 수돗물 사용량과 1 가구 당 쓰레기 배출량도 선진국들 보다 많은 등 소비 패턴의 환경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이에 따른 대기 오염, 쓰레기 매립 문제 등 소비 패턴의 환경 건전성 악화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나라라고 하겠다.

최근의 금융위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나친 물질 위주의 가치관과 과소비에 물들어 있으면서 대량 소비에 따른 환경에 대한 영향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보다 많은 소비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여온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이야 말로 우리의 현 생활 방식의 환경에 대한 영향과 과연 보다 많은 소비만이 보다 많은 만족을 주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적절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되돌아보면, 안빈락도, 청빈사상, 선비사상, 요산요수 등의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은 항상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불필요한 과소비와 욕망을 자제하면서 단위 생산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족과 복지를 극대화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여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전통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을 망각하고 급속히 서구 특히 환경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미국식의 대량 생산-소비방식을 모방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을 상실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구한 전통과 역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과거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통제하여야 할 대상으로 본 동양이 최근의 산업화 과정에서 오히려 욕구의 충족에 더욱더 집착하고 있는 반면 인간의 욕구를 통제하기 보다는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고 물질적인 생산과 소비를 증가 시켜온 서양이 지나친 대량 소비 문명의 환경적인 폐해를 경험하면서 욕구를 무한정 충족시키는 것 만이 발전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인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축소 내지는 통제하여 단위당 생산물로부터의 정신적인 만족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먼저 자각하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이란 동양의 정신적인 가치와 서양의 물질적인 생산-소비방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庸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이 외래적인 생소한 서양의 개념이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



서 잠시 망각하였던 우리의 전통 생활방식과 문화적인 가치체계의 회복을 통해 불필요한 과소비를 줄이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생활방식을 정립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금융위기 직후 우리 국민들이 보여 주었던 身土不二라는 개념의 확산이야말로 바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해 선진국들이 통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일부 선진국들이야 말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이라는 개념하에 자신들도 국산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위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행한 일이나, 금융 위기 과정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과소비가 자제되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과소비 자체가 환경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 보다 항구적인 지속 가능 소비 패턴 운동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경제회복과 함께 또 다시 대형 자동차 모델들의 출시와 판매, 대형 가전 제품의 판매가 급증 (99. 3. 26자 문화 일보, 가전제품 커야 잘 팔린다, 대형 TV 냉장고 세탁기 99. 2월 판매의 60~90% 차지, IMF 금융 위기 이전보다도 급증) 하는 등 최근 과소비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的 논의와 관련하여 특히 우리에게 각별한 시사점을 주는 문제점은 선진국 소비 패턴의 이전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세계화 과정에서 무역과 투자 및 방송,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선진국의 소비 패턴이 동 시간대에 개도국에 그대로 확산 이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작년 말 대형 자동차에 대한 누진세가 선진국과의 통상 협상과정에서 완화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형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급증하게 된 것은 선진국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 패턴이 우리 나라에 확산되어 환경 건전성을 저해한 사례라고 하겠다.

최근 선진국들이 환경을 이유로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무역을 규제하는 문제가 무역

과 환경이라는 문제로 국제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며, 동 논의는 선진국이 환경을 이유로 개도국의 상품에 대해 취하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的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상품중 에너지 다소비 제품 등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 패턴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 개도국들이 수입 규제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는 경우 무역과 환경을 둘러싼 선진-개도국간의 논의가 선진국 위주의 불공평한 일방 통행이 아닌 선진-개도국간에 대등하게 논의 할 수 있는 쌍방 통행의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국제적인 논의 경과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 문제는 92년도 리우 지구 환경 정상회의시 지구 환경 문제의 근본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 선진국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않은 개발방식(unsustainable development)이 지구환경의 근본 문제라고 보고 특히 개도국들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도록 강조한데 대해, 개도국들은 지구환경파괴의 근본 원인과 책임은 지구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한 선진국이 세계전체의 86% (98년도 UNDP통계)라는 과소비(over consumption)를 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들의 지속 가능한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를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대립한 바 있었던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당시 소비패턴과 관련한 개도국의 주장을 선진국 소비의 절대 총량을 줄이라는 압력으로 해석한 일부 선진국들이 동 문제를 Agenda 21에 포함시키는 자체에 대해 강력 반대하였으나, 양측간의 협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선진국들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패턴” (un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이 지구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소비패턴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Chapter 4. Changing consumption pattern 이 Agenda 21에 포함되었다.



당초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 문제를 단순히 선진국의 소비량을 줄이라는 압력으로 해석하고 이에 반대하였던 일부 선진국들이 기술의 개발로 소비량 자체를 줄이거나 국민들의 복지를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소비 패턴의 환경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개도국의 개발에 따른 향후 소비 수준의 급격한 상승과 이에 따른 지구 자원고갈과 같은 환경재앙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 가능 소비패턴”을 개도국에 확산시키는 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늘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구 국가들은 만일 장래에 중국이나 인도 등의 개도국들이 대형 주택, TV, 냉장고, 가구당 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는 방식의 선진국형 에너지와 자원 다소비 소비패턴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지구 부존 자원과 환경 용량에 비추어 심각한 지구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개도국의 소비패턴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문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94년도부터 동 문제를 OECD 내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OECD 환경국이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的 개념정립과 구체적인 정책 지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OECD 환경국은 동 문제를 주요 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다루면서 OECD 국가들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와 함께 개도국들이 소비패턴 논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98. 9월 OECD 환경상태그룹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의 주요 소비패턴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CSD) 와 유엔환경계획(UNEP)에도 확산되어 이를 기구들도 소비패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indicator)의 개발과 통계처리방식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97. 6월 유엔 환경특별총회에서도 소비 패턴문제가 주요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금년 4월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CSD)에서는 제주회의 결과를 검토하는 등 동 문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소비패턴 논의의 확산에도 불

구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 문제는 선진국들이 선도적 책임을 지고 추구해야 할 사안이며 개도국들은 빈곤, 기아 등의 과소 소비(under consumption)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개도국들에게 동일한 소비 패턴 문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개도국들의 이미 적은 소비 마저 줄이려고 하는 선진국들의 부당한 압력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남북간의 소비 격차(consumption gap)와 빈부 격차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동전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소비패턴을 둘러싼 이러한 선진-개도국간의 대립은 기후 변화 등 각종 지구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선진-개도국간의 대립 양상과 매우 유사하나,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환경문제들의 경우에는 대다수 개별 국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반면, 소비 패턴 문제는 개개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다루고 있어 개별 국가의 국내 환경문제와 소비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4. 우리의 입장과 역할

소비패턴 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선진-개도국간의 대립 속에서 우리 나라는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패턴의 환경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는 실질적인 경험을 한 선발 개도국으로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 패턴의 환경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자신들의 환경 보전을 위해 누구나 추구하여야 할 유용한 가치라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특히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고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세계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일수록 선진국들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소비패턴이 여과 없이 그대로 개도국에 이전되는 데에 따른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들도 소비 패턴문제를 선진-개도국간의 소비 격차라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거부만 하기보다는 순수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며, 95. 8월에도 서울에서 유엔의 소비패턴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선발 개도국으로서 OECD 신규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선발 개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여 지구환경 과제를 둘러싼 선진-개도국간의 대립에 교량 역할을 추구하여 왔으며 지구 환경 과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환경 외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5. 제주회의 주제와 의의

금번 제주회의에서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흥 개도국들이 모여 있는 동아시아의 소비패턴을 검토하여 당초 소비패턴 문제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동아시아 개도국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이들 국가들간에 소비 패턴의 환경 건전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와 공동의 인식을 도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 문제의 국제적인 확산과 동 문제에 대한 선진-개도국간의 의견 접근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금번 제주회의는 특정지역 개도국 소비패턴의 환경 건전성을 검토하는 최초의 유엔 전문가 회의로서 그 동안 개념정립과 지표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던 소비패턴 논의의 실제 현실 적용 가능성과 실질적인 유용성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처음으로 선진국 소비 패턴의 개도국 이전 문제와 아울러 전통 가치와의 연계문제를 다루어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 논의의 영역을 넓히고 활성화하는데 주요한 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번 제주회의에서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급격한 소득수준의 상승을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 소비패턴의 환경 건전성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이들 국가들의 소비의 환경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 생활 방식과 문화적인 가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세계화 과정에서의 선진국 소비패턴의 개도국 이전 문제와 특히 최근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와 소비 패턴간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일부 고소득

총의 경우 신분 과시형 경쟁적 과소비 경향이 심하다는 점과 이러한 과소비는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추후에 이를 시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초기 단계에 소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 고급 브랜드 사치성 소비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평균 자동차 교체기간이 약 2.5년으로 일본 3년, 구라파 3.5년보다도 짧다는 점도 발표되었다. 이러한 점은 구라파의 경우 일반적으로 TV 냉장고 등 가전 제품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멀쩡한 제품도 신형으로 바꾸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에서도 비교가 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 신흥 공업국들의 사치성 제품의 수입 급증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간에 존재하는 과시형 경쟁 소비가 개인간에 뿐만 아니라 세계화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과 TV, 영화 등 매스 미디어를 통해 국가와 국가간에도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세계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과 global media를 통해 선진국의 소비 패턴이 급속히 개도국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형 제품의 확산과 같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선진국 소비 패턴의 개도국 확산 문제를 무역과 환경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전통 생활 방식과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개발과 산업화 과정에서 개도국들의 전통가치와 생활방식이 서구식 생활방식과 물질적인 소비지상주의에 의해 급속히 변질되었다는 점과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이 서구 선진국에만 통하는 外生的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는 개도국들의 기존 전통 생활방식도 바로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이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소비패턴 문제를 자신들의 전통과 가치의 재확인 작업의 일환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울러 다수 회의 참가자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밀



려들어오는 서구 선진국들의 소비패턴과 소비문화에 대해 개도국 자신들의 환경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도 개도국 자신의 전통 생활방식과 문화적인 가치를 회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공감되었다. 특히 신분 과시형 경쟁 소비심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유교, 불교, 희교, 기독교 등의 종교적 가치, 전통 생활방식과 정신적인 가치에 기초한 건전한 소비문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시아의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고소득 계층의 과소비를 건전 소비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건전 소비의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금융위기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 정착의 계기로 삼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的 함양을 위해서는 여타 환경 규제와는 달리 직접적인 규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보다는 세제, 가격조정 등의 경제적 수단(economic instrument)과 함께 교육, 홍보, 민간참여 등의 사회적 수단(social instrument)의 동원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도 지적 되었다.

6. 우리에게 국내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금번 제주회의는 우리에게도 기존의 생산부문 위주의 환경 정책에 소비 측면의 정책까지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환경문제를 단순히 폐수, 오염처리라는 좁은 의미의 문제에서 경제와 소비활동 전반 및 사회 의식과 정신적 가치와 문화까지도 연계하는 차원으로 환경 문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하겠다.

국내적으로는 금번 제주회의 결과를 우리의 정신적인 전통 생활방식의 미덕을 회복하고 우리 정신적 가치에 바탕을 둔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내 소비문화의 창출과 발전의 계기로 삼으면서, 특히 IMF 금융위기 이후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나바다’, ‘身土不二’와 같은 건전 소비운동이 단순히 가계

소비 지출을 절약한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과소비에 따른 환경 영향을 줄인다는 환경적인 동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하여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현 행정 부처의 소관 업무 체계상 환경부만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的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련 부처들간의 종합적인 정책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의 확산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패턴의 환경 건전성을 개선하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민간 환경단체와 언론 매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삶의 질 운동이야말로 단위 소비재로부터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보다 풍요롭고 꽤적인 삶을 누리고자 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패턴”과 일맥 상통하는 만큼, 양자간의 조화와 상호 연계가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環境保全]**

약력

- 76년 : 외무고시합격
- 77년 : 외무부 입부
- 77년 : 성균관 대학 경제과 학사
- 79~81년 : Georgetown University 대학원 석사
- 82~84년 : 주 파푸아 뉴기니 대사관 근무
- 86~89년 : 주 뉴욕 총영사관 근무
- 91~93년 : 국제 경제국, 과학 환경 과장
 - 92년도 리우 환경회의 참가
- 93~96년 : 주 OECD 사무소 근무
 - 우리 나라의 OECD 가입 교섭 참가
- 96~99년 : 주 유엔 대표부 근무
 - 경제, 환경 업무 담당
- 99. 3 ~ 현재 : 국제 경제국 환경과학 심의관